



무풍지대 사회 덮친 인구소멸... 지방도시 사라진다

관련기사(2·3·4·5면)

해를 거듭할 수록 신생아 울음 소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 새로운 생명보다 떠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지방 소도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저출산 무풍지대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국내총생산(GDP)이 높았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인구 절벽이라는 현시대 가장 어려운 주제이고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대구 경북뿐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청년 풀림이 지방 소멸을 가져오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눈물겹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군민이 빛나는 달성

우리 참, 꽃이 도움거이다

제28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2024. 4. 13(토) - 14(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



사회 뒤틀린 인구소멸 보육교사들 길거리로...

대구 경북 어린이집 900곳 이상 폐원 경북 영유아 인구 2022년 10만3천명 2017년 15만85명...5년 새 30.8% ↓ 정부, 현행 지방자치제 개선 재검토

아이울음 소리가 끊기면서 보육교사들도 직장을 떠나고 있다.

유치원들이 호소하는 경영상 최대 고충은 유아 모집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착화로 유아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에 학부모보다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 또한 어린이집과의 경쟁으로 유아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유치원 운영 고충 1위 '유아 모집'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유치원(원장)과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5년 주기로 시행한다.

2017년 시범 조사를 거쳐 2022년 첫 본조사가 실시됐다.

2022년 조사에는 전국 유치원 2041개(전체의 23%)와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상 어려운 점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묻는 질문에 41.5%가 유아 모집을 꼽았다.

읍면 지역(45.9%)이나 원생 50인 미만(47.9%)의 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2위는 행정·재정·회계 업무(30.6%)였다.

이어 방과후 과정 운영(4.3%), 급간식 운영(4%), 교직원 관리(3.5%), 원격수업 진행(2.3%), 보호자 상담(2%) 순이었다.

항목별로 봐도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유치원은 전체의 80.8%(다소 어려움+매우 어려움)로, 행정·재정·회계 업무(68.6%)나 원격수업 진행(64.9%) 등 차질 항목보다 한참 많았다.

유치원생 모집난은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로 유치원 원아는 2013년 65만8188명에서 2023년 52만



1794명으로 2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 수도 8,678개에서 8,441개로 2.7%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에 비해 유보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유보통합찬성도를 4점 척도(매우 부정적 1점-부정적 2점-긍정적 3점-매우 긍정적 4점)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원장의 찬성도는 평균 2.34점, 교사 찬성도는 2.15점이었다.

학부모 찬성도(2.83점)는 물론이고 만 3~5세의 무교육, 유치원 무상교육 등 다른 유아교육 정책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유치원 입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의 구분이 사라지면, 그간 어린이집만 다닐 수 있었던 0~2세 영아를 새로 모집할 수 있긴 하지만 유치원보다 서너 배나 많은 어린이집과 원아 모집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거슬러, 유치원 안에서도 공립·사립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내는 월평균 비용(교육비·방과후 수업비 등)은 17만2,000원으로 조사됐는데 공립은 5만2,000원, 사립은 22만4,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저녁돌봄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간은 공립 유치원이 평균 오후 6시 49분, 사립이 오후 7시 20분이었다.

공립유치원의 99.2%는 통학버스에 차량탑승 보조원이 동행하지만, 사립은 보조원 없이 교사 가 동승하는 경우가 86.6%였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99.2%가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그 비율이 38% 수준이었다.

□ 5년 새 경북 600곳 대구 325곳 폐원... 사회 뒤틀린 인구소멸이 보육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저출생 문제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대구·경북은 5년 새 900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어린이집 운영난이 보육서비스를 저해하는 일도 없도록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경북 도내 어린이집은 총 1463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2063곳보다 600곳(29.1%) 감소한 수치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 지역 어린이집은 지난해 1139곳으로 2017년(1464곳)보다 325곳(22.2%)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상인 영유아(만0~6세) 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경북의 영유아 인구는 2022년 10만383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5만85명에서 5년 새 30.8% 감소한 수치다.

대구 2017년 13만7779명에서 지난해 9만8153명으로 28.8% 줄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

원비율 또한 감소했다.

도내 어린이집 정원은 지난해 7만2231명이다. 2017년 9만2669명보다 22.1% 감소했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6.5%에서 67.8%로 8.7%포인트 떨어졌다.

2017년 7만4696명이었던 대구지역 어린이집 정원은 지난해 5만9434명으로 20.6% 줄었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8.4%에서 71.5%로 6.9%포인트 하락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기조가 오래감에 따라 영유아 수는 대폭 감소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낮은 정원충족률로 인해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결국 폐원 수순을 밟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상황에 따라 폐원을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출생고령화 지방자치도 '위기'...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공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는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주년이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별 구역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자체 차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 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주민·구역·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구역 분야에서는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한다.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사·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부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자치권의 경우 현재 인구 수를 바탕으로 짜인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행정체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 지방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반면, 이번 용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조미경 기자

저출산 곧 지방소멸 공식 성립... 인구위기

저출산의 주요 원인
인구학적 요인 꼽혀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 기록



저출산은 곧 지방소멸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지난 2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 출산율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인구 성적표를 받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은 1.58명으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1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세종이 1.1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0.97로 떨어지며 모든 시도 출산율은 0명대로 내려앉았다. 서울 출산율은 0.5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사망자수는 35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남자와 여자 모두 80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12만2800명으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지난해 -2.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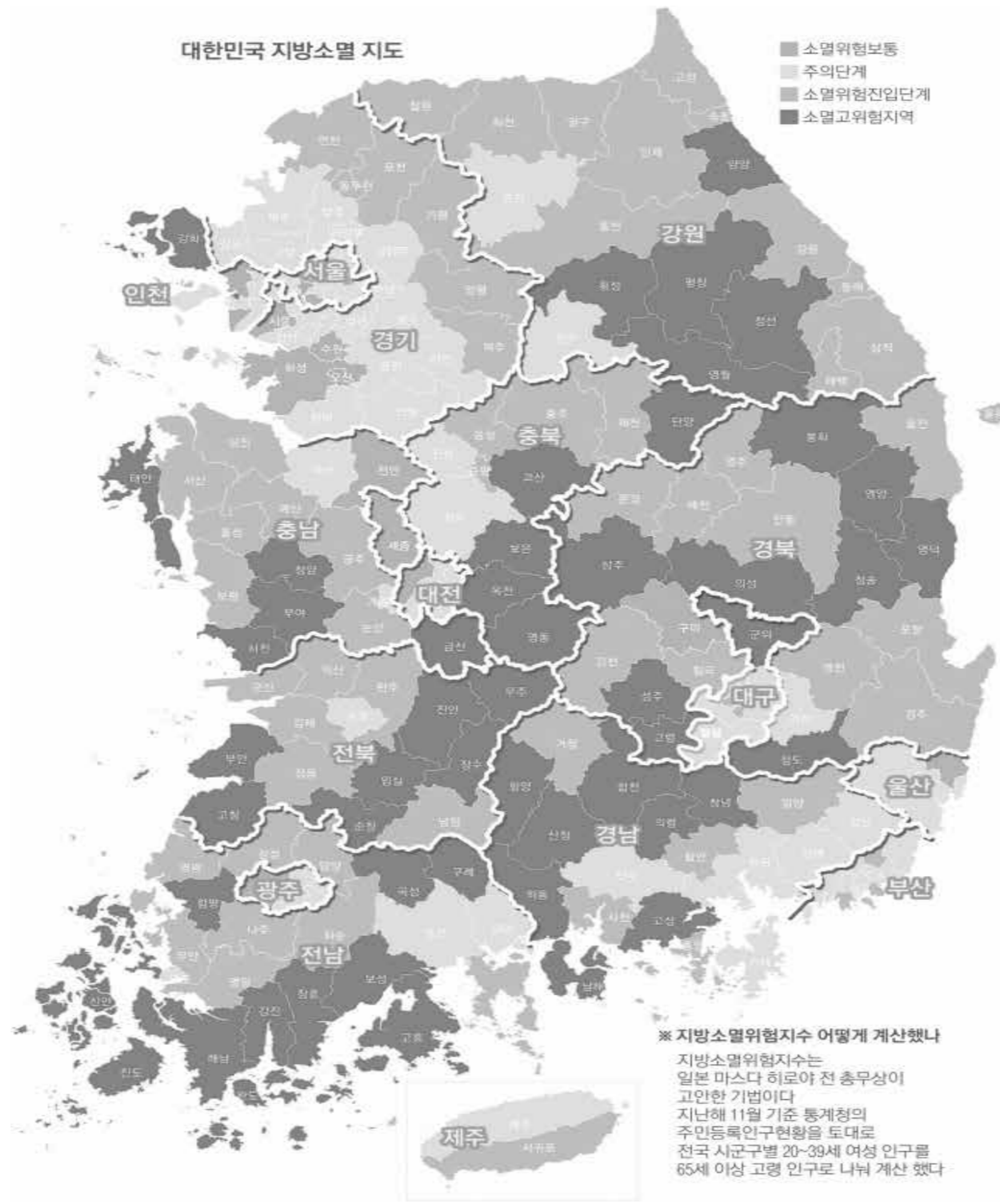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인구학적 요인이 꼽힌다. 15~49세 여성 인구와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의 인구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1995년 대비 2021년 15~49세 여성 인구는 115만 명 이상 감소했다.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는 86만 명 이상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남아선호'와 '태아성 차별 및 여아 낙태'로 인해 출생성비 불균형이 발생했다.



혼인율 하락과 초혼 연령 및 출산 연령의 상승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초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1995년 8.7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감소했다.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회사무관이 발표한 팩트북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5년 28.36세에서 2022년 33.72세로, 여성은 1995년 25.32세에서 2022년 31.26세로 집계됐다.

초산 연령도 2020년 32.3세로 2000년(27.7세) 대비 평균 4.6세 상승한 만큼 난임의 위험이 증가, 임신 가능 기간이 축소돼 둘째 이상 추가 출산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한 몫

사회·경제적 요인의 첫 번째는 고용 형태와 소득 격차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으로 인한 소득 불안은 혼인 시기를 지연시키는 물론 출산의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실제 첫 급여 수준이 높고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첫 아이 출

산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10년 대비 2019년 가구 소득수준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 가구 수가 가장 적었고, 출산율 하락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는 주거 격차다. 200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국토연구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19~34세)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57%)'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유자녀 가정은 무자녀 가정보다 가구 예산의 15~30%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계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15% 이상으로 큰 편에 속한다.

네 번째는 장시간 근로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21년 기준 OECD

최고 수준인 1928시간이다.

기혼 여성의 근로 시간이 길수록 임신 확률이 낮아진다. 미혼 여성의 경우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도 저출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증가했다.

돌봄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다.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자녀 돌봄 부담의 많은 부분이 여성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여성의 근로 시간 단축 또는 고용단절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의 '2020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육아(42.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결혼(27.5%), 임신·출산(21.3%)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모크로스'가 현실화됐다.

2030년 5120만 명, 2070년에는 약 3800만 명에 이르면서 인구의 자연감소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도 2020년 0.14%에서 2070년 -1.24%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수와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률 이룬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심화되는 반면, 기대 수명 증가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2070년에는 46.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1%로 38개국 중 가장 높지만, 2070년에는 46.1%로 가장 낮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인프라 과잉과 대학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한다. 20세 남성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군 인력 충원·운영 어려움의 상시화 및 국방 공백도 우려된다.

아울러 소멸위험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 집중에 따른 사회적 혼잡 비용이 급증하고, 지방은 유지지원 증가 및 공공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30만~50만 명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비·투자가 위축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3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의 초고령층(만 75세 이상) 진입 등으로 노년부양비가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2042년에는 국민연금 적자 전환 등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 기자

구미시 공고 제2024 910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송림네거리 일원에 구미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구미시장

1.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 04. 04. ~ 2024. 04. 25.(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고아읍 행정복지센터

2.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조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3	21~38	주간선도로	6,079	3호광장	대3-40 봉한911-11	일반도로	건교211 ('70.5.12)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1	3	21~38	주간선도로	6,079	3호광장	대3-40 봉한911-11	일반도로	건교211 ('70.5.12)	우회전차로개선 및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8	25~36	주간선도로	4,625	대1-10 봉곡	광장 20호	일반도로	건교 524 ('73.12.31)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3	8	25~36	주간선도로	4,625 (536)	대1-10 봉곡	광장 20호	일반도로	건교 524 ('73.12.31)	일부구간 폭원증가 중)1m~5m

* ()는 노선 구간내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안)조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변경	50	녹지	완충녹지	대1-3호선변	3,165	감) 118	3,047	경북고 181 ('97.9.1)	제2종일반주거지역

3.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내 제출

4.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생략

5.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054-480-5402), 도로철도과 (☎054-480-5463), 고아읍 행정복지센터 (☎054-480-709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 저출산 지방소멸 인간힘

청년 농촌 남고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 농촌 소멸 현상 더욱 부추겨 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청송군, 지방소멸 대응 계획수립 총력전 고령군, 셋째 자녀 양육장려금 20만 지급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도 저출생에 다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일선 지자체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청년이 농촌에 남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농촌 소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북도내 마을마다 20년 된 빈 집이 덩그러니 있다.

빈집 투성이다.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일지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

그렇게 마을은 텅 비어가고, 쇠락한 마을에 사람이 찾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영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신규로 시작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이며, 부부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인 경우이다.

신청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참여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뢰서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AMH) 및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형태 검사다.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가 대상이다.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해당되며, 부부당 회당 100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보건소에 청구서 및 진단비영수증 등 병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5743~57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우리아이 희망출발 프로젝트' 운영

영주보건소는 지난 2일 예비엄마 26명이 참석, 임신부교실 '축복받은 우리아이 희망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임산부교실은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이번은 2회차로 주요 프로그램은 △임신 중 영양관리 △뱃바구니 만들기 △신생아 건강관리 △임산부 영양식·아기 이유식 만들기 △모유수유 교육 △산후 우울증 극복방법 △배냇저고리 꾸미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지난 3월과 이날 진행된 임신부 교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신생아 건강관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유익했다', '배냇저고리 꾸미기를 통해 아기를 만나기 전 설레임이 커졌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수업 부탁드립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 보건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해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예비엄마들이 아기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출산용품을 만들고, 신

생아의 건강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출생장려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인구감소 방지·지방소멸 대응' 계획수립 총력

청송군은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 '2025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중점보고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군은 2022~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송사과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반 구축, 공공인대 주택 조성, K-시티 향노화 사업추진 등 22개 사업에 242억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금 배분 기준에 적합하게 투자 사업 개선 및 보완 방안 등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청송 여성교정시설 유치 등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송사과 재배 기술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정주 인구 유출 방지 및 귀농 인구 유입 효과 증대 방안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논의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현실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청송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사는 청송군이 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군, '셋째 자녀' 176명 양육장려금 2920만원 지급

고령군이 다자녀 가정 양육장려금을 지급한다.

인구늘리기 정책이다.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다자녀 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은 지난해 7월 열린 다자녀 가정과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추진됐다.

고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접수에 나섰다.

176명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3월분 총 2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다자녀 가정 양육장려금은 고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6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20만원, 7~18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5만원을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하며,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9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34세 이하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기당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단,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차액만 범위내에서 지원) 4월 중 지원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고령군은 다자녀 가정의 보육·육아·교육기의 안정적 지원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결혼·출산·양육·돌봄·교육분야별 사업을 추진, 다양한 정책발굴을 한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 총선 '안갯속 박빙'... 조지연 對 최경환



‘힘있는 젊은 일꾼’ VS ‘인물론’ ‘피말리는’ 승부 각 후보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SNS 홍보전 치열

경산시 4.10총선은 안갯속 박빙양상으로 후보들은 선거 막판 부동층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총선 1주일을 앞둔 3일 현재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37)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69)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각자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SNS로 홍보하는 등 치열한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조지연 후보는 집권여당 ‘힘있는 젊은 일꾼’을 외치고 있으며, 최경환 후보는 5선 도전의 ‘인물

론’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TK지역 25개 선거구 중 경산을 접전지역으로 꼽고 ‘조지연 구하기’에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조지연 후보와 함께 대한노인회 경산지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경북지역 국회의원 송인석·임이자·김정재·정희용 후보는 조 후보 지원군으로 나서 지난 1일 경산에서 지지유세를 했다.

선거 현수막에 ‘대통령이 인정한 일꾼’을 표시한 조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있는 후보로 홍보하

고 있다.

그는 “집권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저만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회발 전특구 유치와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대형 아웃렛 유치 등 굵직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대규모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동층 공략에 총력이다.

반면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4선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집권여당 원내대표 등의 경력을 내세워 인물론으로 유권자들에게 파고 들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4년간 경산 발전이 정체되었고 경산에는 지금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맞섰지만 반드시 당선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호소하고 있다.

조지연 후보와 최경환 후보 캠프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홍보전도 치열하다.

최 후보측은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경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조지연 후보 33.8%, 최경환 후보 42.4%)를 SNS로 홍보전 시동을 걸었다.

이 조사에서 진보당 남수정 후보는 8.2%, 녹색정의당 엄정애 후보는 3.9%로 뒤를 이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 ARS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비율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응답률은 4.6%.

이에 맞서 조 후보측도 KBS 대구방송총국이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경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의 여론조

사 결과(조지연 후보 38.7%, 최경환 후보 39.7%)를 SNS로 홍보하며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측불허의 ‘초박빙 대결’로, 선거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승부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당 남수정 후보의 지지율은 6.3%, 녹색정의당 엄정애 후보는 1.5%가 나왔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조 후보와 최 후보는 3일 오후 경산 자인시장에서 치열한 가두유세 맞대결을 펼친다.

신경은 기자

양문석 대출의혹 새마을금고, 금감원도 조사 착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금감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감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의 공동감사 참여는 행정안전부가 현장조사 참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일 금감원과 협의, 관련법에 따라 금감원에 감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 금감원에 새마을금고 현장 조사를 위한 감사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지원인력 5명

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에 도착해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위한 공동 감사에 착수했다.

취재진의 빔바치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동감사를 통해 이미 지난 1일부터 현장을 검사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과 함께 양 후보가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은 11억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인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을 넘어 ‘불법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의 대출이 이

뤄진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1200여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착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 측은 “해당 문제(양 후보의 대출) 이외에 해당 금고에서 이뤄진 사업자 대출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북선관위, 선거법위반 무더기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허위 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2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 경력을 공표한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여론조사 위반, 사전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인쇄물 살포, 유사기관 조직, 거소투표 관련 등이다.

10개 시·군에서 23건이 적발됐다.

포항이 4건으로 22개 시·군 가장 많았으며 구미 3건, 안동·경산·칠곡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자는 국회의원, 일반인, 공무원, 언론인, 자원봉사자 등이라고 3일 밝혔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 명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김부겸, 민주당 열세지역인 보수심장 T·K에서 지원유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수석대위장은 지난 2일 당의 열세 지역인 대구를 찾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고도 아무도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대구 후보자 합동 유세에서 “대구가 유일하게 정치가 그대로 고여있으니 어디 가서 경쟁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민주당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사이 다음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국

가 운명을 갈팡질팡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또 도도 국회마저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대구는 왜 이리 오랫동안 바뀌지 않느냐”며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들을 국회에 보내주시면 4.10 심판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지는 성숙한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국가를 함께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며 “민주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사투리로 “오늘(집에) 돌아가거든 민주당이 옛날보다 으싸하더라. 힘 좀 많이 내더라. 이번에 한번 보내주자고 말 좀 해주이소”라고 외쳤다.

합동 유세 현장에는 중남(하소), 동·군위갑(신효철), 북갑(박정호), 북을(신동환), 수성갑(강민구), 달서갑(권택호), 달서을(김성태), 달서군(박형용) 등 민주당 후보들과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다.

조미경 기자

국힘 구미을 강명구 “민주, 대통령 탄핵하고 싶어 안달 난 정당”

4.10 총선에 나선 강명구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의 후보(47)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안달이 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날 구미 선산장에서 진행한 집중 유세를 통해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임명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그런 일이 다시 안 벌어지리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은진 기자

했다.

그는 “김 후보는 전날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후보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에 가까운 왜곡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된 방송 시간 때문이었다면 이제라도 국가의 주권과 보수의 핵심 정체성에 관련된 물음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경 기자

대구 중·남구 연일 ‘NLL’ 논란... 도태우, 김기웅에 입장 표명 재촉

대구 최대 접전지 중·남구에는 ‘NLL(북방한계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취소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 캠프는 3일 성명을 통해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는 NLL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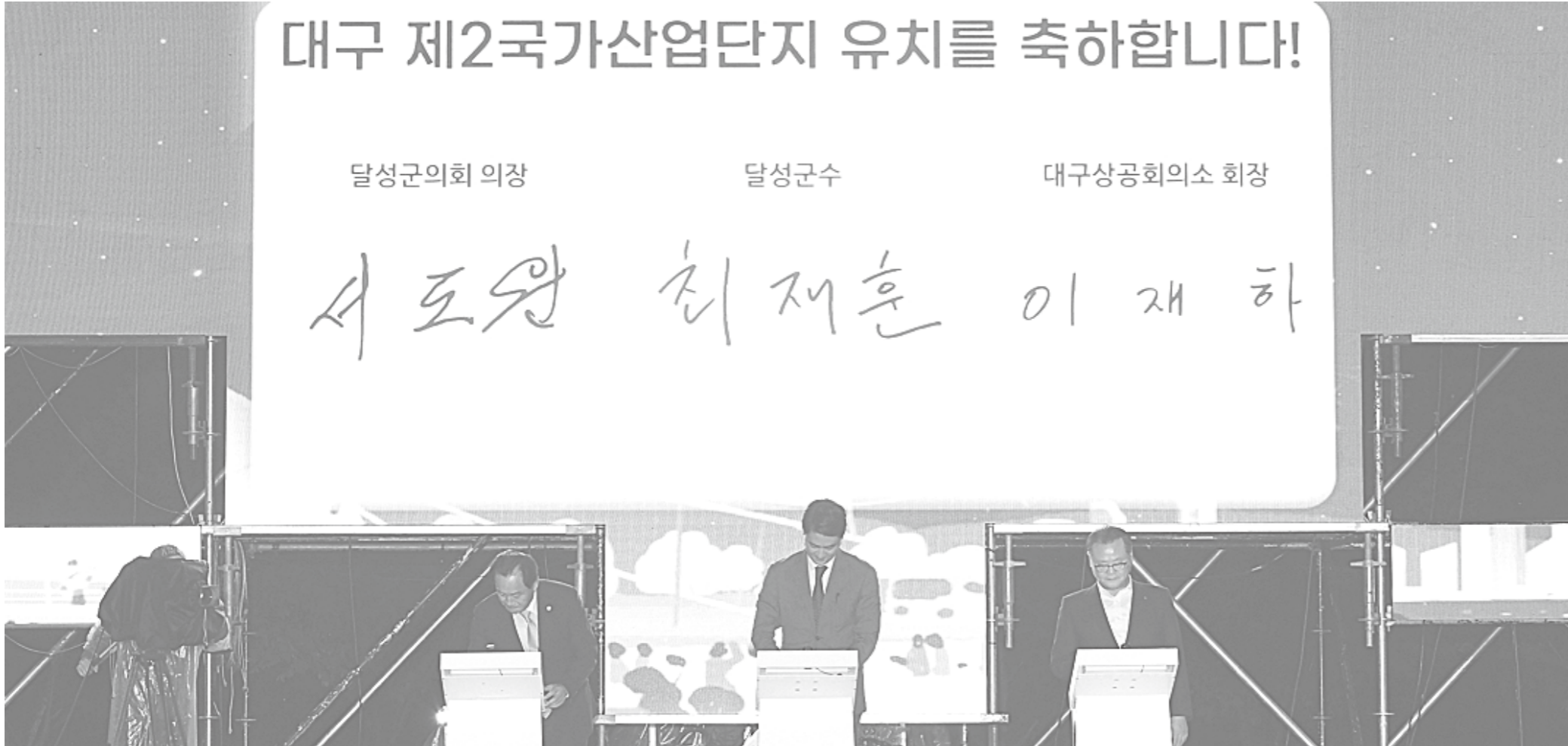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화 공단 이사장과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및 유관기관 단체장과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단 전직원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분야 '행정안

전부 장관 기관 표창'과 지난해 해 동안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군수 표창과 군의회의 장 표창을 수여했다.

공단에서는 공단에 도움을 주신 이해관계자에게 공로패 수여와 우수 직원에게 이사장 표창을 전달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미래 먹거리 두 동력... 국책사업 유치 + 중소기업 육성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축하합니다!

달성군의회 의장

달성군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서도원 최재훈 이재하

주요 국책사업,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등 유치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두 마리 토끼 달성'

최근 달성군의 비상이 심상치 않다. 달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달성'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대구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와 기업 및 지역대학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해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모빌리티 모터소부장 특화단지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지역산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최초·최대의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지난달 21일 전국에서 첫 번째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상반기 중 선정될 경우 이차전지, 로봇, 전기차 관련 기업 유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군은 지역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술 이전료 지원 및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기업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를 윈스톱으로 지원한다.

군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돕고, 이전 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지난해 기술이전료 지원 8건, 사업화 지원 5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최대 650만 원이었던 기술이전료 지원금은 올해 1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기반으로 8개 기업에 기술이전료 최대 1천만 원, 5개 기업에 사업화지원 최대 3천만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래모빌리티로봇기계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3개 기업에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업 고용환경 개선

대구시 구군 최초로 외국인인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주가 아파트,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를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5개 기업의 직원 69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 연령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하

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총 3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23개 기업에 53명을 지원한다.

달성군은 사업을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기업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장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올해부터 4050+ 경력형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대구시 구군 최초 중장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채용 3개월 후부터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참여 근로자에게는 채용 3개월 후부터 분기별로 90만 원씩 최대 2회 한도로 지원한다.

취업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중장년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애로 간담회 정기적 진행

새해를 맞아 기업애로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산업단지별 관리기관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성서5차산업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를 완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노상 주차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부터 업종별 기업간담회, 농공단지 기업간담회 등도 열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달성군은 올해도 소상공인 특별보증 사업에 대구시 구·군 중 최대 규모를 출연함으로써 지역 내 사업장 경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 사업은 달성군이 출연금을 내고 출연금의 10배를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하고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대구시 구·군 중 1회 출연금으로 최고 금액인 10억 원을 출연했고, 3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 총 13억의 출연금으로 13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새해에도 대구시 구·군 중 최대 규모인 10억 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565건을 지원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133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500만 원의 보증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업당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점도 눈길을 끈다. 달성군은 이 밖에도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라는 군정목표에 발맞춰 우리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등이 차질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애로사항에도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5일 '대구 범어 아이파크' 전분주택 개관

4월 9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전분주택을 오는 5일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인 '범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4층 4개동에 전용면적 84~121㎡의 아파트 418가구, 오피스텔 30실(37·59㎡) 규모다.

이 중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84㎡ 143가구와 오피스텔 30실을 일반 분양한다. 청약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를 접수하고, 오피스텔은 13일 진행한다. 이곳은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며 향후 단지 바로

옆 '범어 2차 아이파크' 완공시 약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교통여건·교육환경·생활인프라·자연환경 등이 모두 우수한 단지다. 특히 '조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도심 속 쾌적한 숲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 대구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자랑하며 다양한 인프라 시

설 및 아이파크 브랜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어 아이파크'는 독일 시스템 창호 '베카 창호'와 '몰리' 주방가구 및 욕실용품, 이탈리아 세라믹타일, '이건 마루'의 광폭 강마루와 중문, 개방형 시스템가구 등 7가지 고급마감재가 적용된다. 가구당 1.76대의 주차공간과 전 세대 아파트 지하창고가 제공된다.

대구의 강남인 수성구에 자리한 이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대형학원, 대구어린이세상이 위치해 있다. 걸어서 2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이 있고 대구 도심 전역 및 KTX 동대구역 접근이 쉽다. 또 수성시장, 황금시장, 범어먹거리타운, 범어로데오타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도 가깝다. 전분주택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다. 조여은 기자

2024 대구마라톤대회 날 도시철도 이용하세요

오는 7일 2024 대구마라톤대회 개최 차량이용 자제, 도시철도 이용 당부

오는 7일 2024 대구마라톤대회 개최로 대구스타디움 일원과 수성구, 중구, 동구 등 도심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교통통제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통제구간은 달구벌대로, 동대구역, 동촌로 등이다.

2024 대구마라톤대회는 시 전역을 한바퀴 도는 순환코스 변경돼 교통통제 영향권이 넓어져 당일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생생 등 불가피한 경우 2024 대구마라톤대회 누리집을 통해 마라톤 코스 및 구간별 우회도로를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공항 이용객의 경우 항공편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경로를 꼭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당일 현장에는 경찰, 모범운전자연합회, 공무원 등 교통안내 인력이 1600여 명이 배치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올해 코스 변경으로 인한 교통통제 영향권이 넓어져 당일 도심지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다각도로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민들께 당일 차량운행 자제와 도시철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보건소, 방역 소독 요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감염병예방 홍보

감염병 예방 인식강화, 안전한 중구

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감염병 매개 모기 및 위생 해충을 방제하는 방역

소독요원 16명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요원들의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 및 업무수행 향상을 위한 △방역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중년 우울증 예방교육, △폭염대비 열열질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3월 21일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심혈관 질환 및 노령화에 따른 심정지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해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방역소독요원은 4월 1일부터 10월까지 담당구역별로 방역 오토바이 및 분무 장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기침예절, 식중독 예방수칙, 결핵 및 인플루엔자에

방수척 배너를 부착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어간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방역소독요원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주시 황성동 자율방재단,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기탁

경주시 황성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양현두)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화장지와 컵라면 등으로 구성된 후원물품은 황성동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손정우 자율방재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현두 황성동장은 “순정우 단장님과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율방재단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읍면에서도 KTX·SRT 타기 편리 동서 권역 오가는 급행버스 신설

경주역과 양남, 감포, 건천, 서면 오가는 급행버스 3개 노선 지난달 29일 첫 운행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 기대

경주역에서 동경주권(감포읍·양남면)과 서경주권(건천·서면)을 오가는 급행버스가 첫 운행에 나섰다.

시는 경주역과 읍면지역을 오가는 △1100번(경주역↔불국로터리, 어일, 감포) △1150번(경주역↔보문단지, 불국사, 양남면) △1300번(경주역↔건천, 서면, 현곡푸르지오) 급행버스 노

선 3개가 지난달 29일부터 운행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1100번은 왕복 4회로 경주역↔시외보스터미널↔옛)불국역↔문무대왕면↔감포 △1150번은 왕복 3회로 경주역↔시외보스터미널↔보문단지↔어일시장↔양남 △1300번은 왕복 6회로 경주역↔건천↔서면↔현곡 등이 주요 노선이다.

해당 노선 3곳은 지난해 11월 운행에 나선 경주역~안강·외동 간 급행 2개 노선의 후속 사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그간 경주역을 오가는 직행노선이 없

어 KTX나 SRT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경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역과 읍면지역을 오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설 노선을 최소 정거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용객 추이 등 모니터링한 후 운행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직행 버스 신설은 수차례 시민과의 대화 등 소통행정을 통해 건의된 간격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급행노선 신설로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불국사 상가시장 탈바꿈... 아늑한 휴식공간 제공



경주 불국사 상가시장 내 도로 및 보행로 등 공용공간이 새 단장을 마쳤다. 3일 시에 따르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불국사정원 마켓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상가시장 바닥 정비 방문객 쉼터 조성

그간 불국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불국사 상가시장은 무분별한 주차 차량들로 인해 휴식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시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벤치와 잔디로 이뤄진 야외 공간을 조성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보행로를 정비했다.

특히 상가시장 이용 후 방문객들의 쉼터 제공과 주변 상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차양시설과 조형물 설치 등 고객 편의 시설도 마련했다.

시는 상가시장 외부 경관 개선과 이용객 휴식공간 제공으로 상가 활성화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한편 올해 불국사 상가시장에서 야간까지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황훈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정비 공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쇼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화랑마을, '청년 화랑캠프' 12월까지 운영

10대 뉴브랜드사업 취업 역량강화 특강 다양한 정보 제공

경주 화랑마을이 올해 더욱 새로워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청년 화랑캠프'를 운영한다.

청년 화랑캠프는 청년의 취업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립 역량 강화와 청년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 등 소통의 장을 마련을 위해 펼쳐진다. 지난해 참가자 만족도는 95%로 호평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4~6월(월 1회) 진로와 취업 역량 강화 특강, 9~10월(월 1회) 우수·선진 기관 견학, 11~12월 진로 탐색 및 공감과 소통 토크 콘서트로 구성돼 총 7회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화랑마을 내 체험만 가능했다면 올해는 우수 선진기관을 방문해 직접 현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참가는 청소년 및 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총 4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화차 별 상시모집(40명)이고, 화랑마을로 공문 또는 이메일(sys259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랑마을 홈페이지 또는 활동운영팀(054-760-2414)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숙 화랑마을 총장은 “화랑마을이 10대 뉴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 '노후·훼손 건물번호판' 대대적 정비

4375개 대상 4월 모두 교체 주소정보 사용 한결 편해져

경주시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나섰다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물번호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주소사용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건물번호판은 위치와 주소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난 2011년 7월 도로명주소 사용과 함께 설치됐다.

이후 장기간 햇빛 노출로 훼손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인성이 떨어져 일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먼저 내구 연한 10년이 지난 건천·신내·서면·현곡 4개 지역 등 건물번호판 중 훼손

및 노후화가 심각한 4375개를 이번 달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단에 도로명이, 하단에 기초번호를 표시하던 기존 방식 대신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상단에 기초번호와 하단에 도로명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꿀 계획이다.

최정수 경주시 도시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소사용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서비스 및 구조작업에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건축물 수리·개축 등으로 재교부를 원할 경우 시청방문 또는 정부 24로 신청해 수령·부착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 추천 받는다

베스트 친절음식점으로 국내·외 방문객 맞이 준비

경주시가 다음달 19일까지 올해 상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 선정을 위한 시민·관광객·유관기관·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은 참여링크(네이버 폼 <https://naver.me/G6fz61P9>) 또는 QR코드를 통해 친절음식점을 추천하면 된다.

이번 베스트 친절음식점 선정은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선정 절차는 1차 추천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2차 현지심사를 진행한다.

2차 현지심사는 △응대서비스 수준 △고객 편의시설 △위생관리 △체감 만족도 등 6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친절음식점에 선정된 5곳은 표창패 수여 및 각종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의 부상이 수여된다.

장세용 경주시 식품안전과장은 “도시 친절이 미지를 제고를 위해 2024년도 베스트 친절음식점 선정을 예정이니 시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립극단, 제129회 정기공연 '8명의 여인들' 개막

로베르 토마의 50년대 희곡 오는 19부터 21일까지 3회



경주시립극단이 제 129회 정기공연 '8명의 여인들'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경주에

술의전당 원화홀에서 막을 올린다. 경주시립극단이 아쉽게 준비한 올해 첫 작품으로 프랑스의 유명 작가 로베르 토마의 50년대 희곡 '8명의 여인들'을 원작으로 한 추리코믹극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아빠 마르셀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고립된 지택에서 용의자는 아내와 두 딸, 여동생, 처제, 장모, 두 명의 가정부 중에 있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벌어지는 음모와 질투를 코믹하게 풀어냈다.

공연시간은 19일 저녁 7시 30분, 20일과 21일은 각각 오후 3시이며, 중학생 이상 관람가

능하고 러닝타임은 70분이다.

공연티켓은 경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티켓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하고 입장료는 전 좌석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립예술단 운영팀(054-779-6094)으로 하면 된다.

김한길 경주시립극단 감독은 “8명의 여인들은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서로에 대한 의심, 감추어진 욕망, 위기 속에 드러나는 위선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며 “우리의 확신은 어떤 토대로 만들어졌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2024 화랑별빛달빛 기행 참가자 모집

오는 17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숨어 있는 문화유산 탐방

경주시가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화랑별빛달빛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해설사와 함께 저녁시간 지역 다양한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활동이다.

운영기간은 4월 1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 운영된다. 참가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가

족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접수는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15일 18시까지 경주공공서비스 예약(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마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054-779-6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 향상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탐방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느끼는 현장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